

<2013 국가직 7급 기출문제- 심철수 교수님>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X-비효율성
- ④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③

해설> ③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① 불완전경쟁(독과점)의 존재 ② 외부효과(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 ③ 공공재의 존재 ④ 규모의 경제의 과다(→ 자연독점) : 평균수익의 증가와 평균비용의 감소 ⑤ 정보의 비대칭성 · 불완전성(정보의 편재) : 대리인 문제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① 정부조직의 내부성 : 사적 목표의 설정,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②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부작용) ③ 비용과 수익(혜택)의 분리 : Wolf의 비시장실패, 서비스의 무가격성, 무임승차성 ④ X의 비효율성 ⑤ 공공서비스 공급의 독점성(경쟁의 결여) ⑥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 ⑦ 정보의 불충분성(대리손실) :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함

▶ 2013 비전행정학 p.277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추구하는 정책
- ②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정답> ①

해설> ① 설문은 분배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다.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 등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분배정책은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이라고도 한다. 분배정책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수출특혜금융,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불하, 택지분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국립공원 조성, 벤처기업의 지원, 군수품 구매, 항만 · 도로 ·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등이 있다.

②는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정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320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정답> ④

해설> ④ 비슷한 선례가 있는 문제는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쉽게 의제로 채택되고, 유행되고 있는 정형화된 문제들도 정부의제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2013 비전행정학 p.360

[4] 킹던(J.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 (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 (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정답> ①

해설> ① Kingdon은 ‘정책창(흐름창) 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즉 문제의 흐름 · 정치적 흐름 · 정책적 흐름이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의 창(정책창)이 열린다고 하였다(1984). 정책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 2013 비전행정학 p.394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답> ③

해설> ①②④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회의 유형 구분
(1) 자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보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대통령 소속) 등 (2) 조정위원회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등

(3) 행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저작권심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등

(4) 독립규제위원회

①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②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개입(규제)이라는 측면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2013 비전행정학 p.656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해임(解任)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처분'이다. 단, 공금횡령·유용 등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지급한다.

징계의 종류

(1) 경징계(輕懲戒)

① 견책(譴責)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써 6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도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② 감봉(減俸) : 감봉은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12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2) 중징계(重懲戒)

① 정직(停職) :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18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② 강등(降等)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함)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18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③ 해임(解任) :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처분'이다. 단, 공금횡령·유용 등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지급한다.

④ 파면(罷免) :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4을, 5년 이상은 1/2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지급한다.

▶ 2013 비전행정학 p.1016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 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의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u>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u>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 2013 비전행정학 p.1204, 1239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과학적 관리론	㉡ 종신고용보장
㉢ 보수의 형평성 요구	㉣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 ① ㉠, ㉡
 ② ㉡, ㉢
 ③ ㉠, ㉡, ㉢
 ④ ㉠, ㉡, ㉢, ㉣

정답> ③

해설> ③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약하다. 따라서 종신고용보장은 직위분류제의 발달과 관계없다.

직위분류제의 발달배경
(1)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함 :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적인 계급제도의 전통이 없이 산업화가 실현된 미국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2) 엽관제 폐해의 시정 : 엽관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공직체계를 정립할 것이 요청되었다.
(3) 직무급 확립의 필요성 :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주의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보수제도(직무급)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 · 직무평가가 촉진되었다. ‘동일직무 동일보수원칙’의 구현이 직위분류제 도입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직위분류법의 제정(1923년) :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어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에 활용되었다.

▶ 2013 비전행정학 p.881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 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을(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을(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정답> ④

해설> ㉠은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 제165조), ㉠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제149조), ㉡은 행정협의회(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대한 설명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1473, 1480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은 지방소비세, ㉡은 지역자원시설세, ㉢은 지방소득세, ㉤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 지역자원시설세와 ㉤ 지방교육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구 분	도 세		시 · 군세	특별시 · 광역시세	자치구세
지 방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특례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 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2013 비전행정학 p.1441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정답> ④

해설>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수평적 조정장치에 해당한다.

조정기제

I. 의의

- (1) 조정이란 조직 내 부서 간, 계층 간의 협력의 질을 의미한다.
- (2) 조직이 어떤 유형의 부서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조직의 전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제가 요구된다.
- (3) 조정에 필수적인 정보의 요구에 적당한 수직적 · 수평적인 정보의 흐름이 되도록 조직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II. 수직연결

수직연결은 조직의 상하간 활동을 조정하는 연결장치이다. 하위계층의 조직구성원은 최고관리층이 제시한 조직목표에 일치하도록 업무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때 고위관리층은 하위계층의 활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직연결을 위한 구조적 장치로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직위의 추가, 수직정보시스템이 있다(Daft).

(1) 계층제

- ① 수직연결 장치의 기초는 계층, 명령체계이다.
- ② 조직구성원이 모르는 문제에 직면하면 바로 상위의 계층에 보고하고, 문제의 해답은 다시 아래 단계로 전달된다.
- ③ 이 때 조직도표상의 선이 의사소통의 통로로 작용한다.

(2) 규칙과 계획

- ① 반복적인 문제와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상위계층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없이도 부하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 ② 규칙은 조직구성원들이 의사소통 없이도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③ 계획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좀 더 장기적인 표준정보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연초에 정교한 사업계획서와 실행예산서를 마련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부서의 사업계획과 자원할당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 계층 직위의 추가

- ① 조직이 처리할 문제와 의사결정이 많아지면, 계층제와 규칙 · 계획의 장치로는 관리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게 된다.
- ② 이 경우 수직적 계층에 직위를 추가함으로써 상관의 통솔범위를 줄이고 좀 더 밀접한 의사소통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 ③ 이를 위해 계선계층에 참모 직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계선직위를 신설할 수 있다.

(4) 수직정보시스템

- ① 수직연결의 역할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장치는 수직정보시스템이다.
- ② 이는 상관에 대한 정기보고서, 문서화된 정보, 전산에 기초한 의사소통제도를 마련하여 조직 상하간 수직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제고하고, 효율적 정보의 이동을 가져온다.

III. 수평연결

수평연결은 조직 부서간 수평적인 조정과 의사소통의 양을 말한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부서간 벽을 허물고, 조직목표와 단합된 노력을 위해 조직구성원 간의 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이 급변하고 기술이 유동적이며 조직목표가 혁신과 유동성을 강조할 때, 더욱 수평적인 조정장치가 요구된다. 다

음과 같은 수평연결 장치가 있다(Daft).

(1) 정보시스템

- ① 컴퓨터를 통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체계를 가져왔다.
- ②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직 전체의 구성원들은 정규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2) 직접접촉

- ① 한 단계 높은 수평연결 장치는 조직문제에 관계된 관리자와 직원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다.
- ② 한 가지 방법으로 연락담당자를 둘 수 있다. 한 부서에 소속된 연락담당자는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 및 조정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 ③ 예를 들어 개발부서와 제조부서 간에 연락담당자를 두어 신제품 개발시 제조시설의 제약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임시작업단

- ① 직접접촉과 연락담당자는 보통 두 부서 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나, 여러 부서 간의 연결은 임시작업단과 같은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다.
- ② 임시작업단(TF : Task Force)은 특정 문제에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로 각 대표들은 자기 부서의 이해를 대표하고 임시작업단 회의정보를 각 부서에 전달한다.
- ③ 임시작업단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 부서 간의 직접적인 조정장치로서 수직적 계층의 정보처리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적인 조정기제이다.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임시작업단은 해산한다.

(4) 프로젝트 매니저

- ① 좀 더 강력한 수평연결 장치는 수평적 조정을 담당할 정규 직위를 두는 방식이다. 이 직위는 사업관리자, 산출물관리자, 브랜드관리자라고 불린다.
- ② 부서 내에 위치하는 연락담당자와는 달리 부서들 밖에 위치하여 여러 부서 간의 조정을 책임진다.
- ③ 이 조정자는 특별한 인간관계 기술이 요구되며, 상호조정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설득력이 요구된다. 보통 조직에서 사업관리자의 책임은 많지만 그에 상응한 권한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5) 프로젝트 팀

- ① 사업팀은 가장 강력한 수평연결 장치이다.
- ② 사업팀은 영구적인 사업단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 간에 장기간 강력한 협동을 요할 때 적합한 장치이다.
- ③ 조직이 대규모의 사업, 중요한 혁신, 새로운 생산라인이 필요할 때 이 장치를 채택한다.

조정장치
(1) 수직적 조정장치 계층제 ⇨ 규칙과 계획 ⇨ 계층 직위의 추가 ⇨ 수직정보시스템 (조정 필요성과 비용 높음) (2) 수평적 조정장치 정보시스템 ⇨ 직접 접촉 ⇨ 태스크포스 ⇨ 프로젝트 매니저 ⇨ 프로젝트팀 (조정 필요성과 비용 높음)

▶ 2013 비전행정학 p.555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 ㉡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 ㉢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 ㉣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② 행정통제의 과정은 통제기준의 확인 ⇨ 정보의 수집 ⇨ 평가 ⇨ 시정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 2013 비전행정학 p.1275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 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 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높고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수직적 · 수평적 전문화와 직무의 효과성 간의 관계>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	일선 관리직무
	낮음	(특수)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직무확장과 직무풍요화
(1) 직무확장(job enlargement)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이다. 즉, 수평적인 전문화(분업)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2)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

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즉,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 2013 비전행정학 p.621, 553 / 2N2 서브노트 p.49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답> ①

해설> ①은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1)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는 임무에 대한 비전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대감과 확신을 보임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2) 영감적 리더십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부하들을 격려한다.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3) 촉매적 리더십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의지 그리고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4) 개별적 배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고려함은 물론, 부하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부하들의 개인적 성장을 도와준다.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5) 지적 자극 기존의 문제해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으로 도전의식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6) 조직의 생존과 적응의 중시 외부로부터의 자원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중시한다. (7) 변화지향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변동추구적 · 개방체제적 리더십이다.

▶ 2012 비전행정학 p.719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정답> ④

해설> ④ 제도화된 또는 구조화된(institutionalized) 부패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공식적 행동규범의 준수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1) 일탈형 부패 주로 개인적 부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체제적(systemic) 부패 제도화된 또는 구조화된(institutionalized) 부패로서, 포괄적 부패가 만연되어 부패가 제도화 · 일상화되고, 공식적인 행동규범의 준수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적 부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반부패 선언과 실천이 심히 괴리되는 형식주의가 만연된다. ② 부패 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이 일상화된다. ③ 부패행위자를 보호하고,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한다. ④ 부패에 쫓은 조직 내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의 죄책감을 해소한다. ⑤ 부패 적발의 공식적 책임을 진 사람들은 책무 수행을 꺼린다.

▶ 2012 비전행정학 p.1042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 ②

해설>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대상	
가입 가능 대상	가입 금지 대상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4) (1)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2) 지휘 · 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2012 비전행정학 p.1013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합목적성 차원의 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사유가 아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지방자치법 제171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1)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1364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CIO)의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정답> ③

해설> ③ 중요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

정보화책임관의 담당 업무(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 제2항)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 계획 등과의 연계 · 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 · 배분 · 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 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2012 비전행정학 p.775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 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중시하는 예산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Top-down budget) 관리모형에 해당한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와 한계
1. 기대효과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략적 자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투명성 제고 자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므로 배분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즉, 국무회의의 토론을 통하여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비효율적 관행 개선 부처별 과다요구와 예산기관의 대폭삭감에서 벗어지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4)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통하여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을 강화한다. (5) 기 타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자원확보의 유인이 저하될 것이다.

II. 한 계

- (1)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일 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집행상의 점검이나 통제가 불필요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배정과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2) 사업별 자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
- (3) 각 부처의 이기적 · 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 (4)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 (5) 개별 부처에서는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현실적인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는 한도액이 현재기준으로 배정되어 기존사업들이 자원배분에서 기득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업 혹은 부처별 총액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상황을 균형이라고 전제하고 총액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다.
- (6) 부처의 지출한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선심성 예산편성의 징후도 나타나며, 책임을 뒤로 미루는 예산(deferred budgeting)도 등장할 우려가 있다(배득중).

▶ 2012 비전행정학 p.1195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 · 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 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후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②

해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1) 개념 A. F. Osborne이 개발한 집단자유토의기법으로써 심리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면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을 금지하는 가운데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교환하는 주관적 · 질적 분석기법이다. (2) 내용 및 특징(원칙) ① 제약 없는 아이디어(자유분방의 원칙) : 심리적 제약이 없는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문제와 관계가 없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허용한다.

- ② 비판의 금지[비판엄금(non-evaluation)의 원칙] :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하게 된다.
- ③ 편승기법[Piggy-Backing, 무임승차의 원칙(building)]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편승(수정 · 추가 · 모방 ·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무임승차를 의미한다.
- ④ 양(量)에 의한 질(質)의 창조[질보다 양의 원칙(quantity breeds quality)] : 양(Quantity)이 질(Quality)을 낳는다는 인식 하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디어의 제시를 기다린다.
- ⑤ 아이디어의 평가와 종합 :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유사한 아이디어의 취합, 실현불가능한 아이디어의 제거 등을 통하여 몇 가지 대안을 선정한다.

▶ 2012 비전행정학 p.415